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 소리

2026년 8월 동향 (제877호)

- ▶ 7월 대비 2.4% 감소(1,336,828건)
- ▶ 재정경제부, 전북, 서울 관악구, 충북교육청 등이 전월 대비 증가
- ▶ 9월 민원주의보로 ‘노인돌봄’ 선정,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인 돌봄시설 운영 내실화,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 제시

국민의 소리

No. 877

월간 동향

2026년 9월

01 민원 동향(8월) 1

민원 추이 / 신청인 현황 / 주요 민원

02 민원주의보(9월) : 노인돌봄 3

03 기관별 동향(8월)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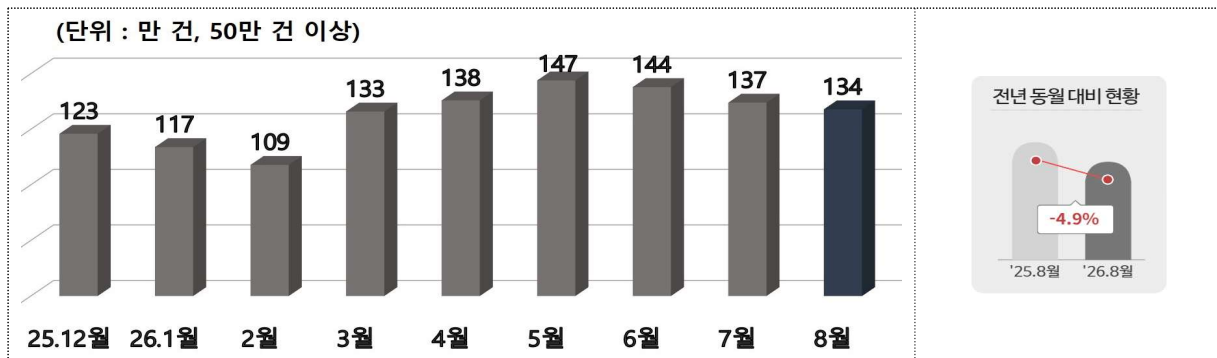
중앙행정기관 / 지방정부 / 교육청 등

01 | 민원 동향(8월)

민원 추이

- 8월 민원발생량은 총 1,336,828건*, 전월(1,369,481건) 대비 2.4% 감소, 전년 동월(1,405,982건) 대비 4.9% 감소

* 국민신문고, 지자체 민원창구(시도포털, 새울) 등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통계



- 경기도(30.7→30.3%) 포함한 수도권 비중 소폭 감소(52.6→52.2%)
- 지방정부 민원 비중 증가(82.1→83.1%), 중앙부처 감소(13.4→12.7%)

신청인 현황

- 남성(65.2%) > 여성(34.8%), 40대(26.5%) 주로 제기

< 연령대별 주요 이슈 >

연령별	주요 이슈
10대	성적처리 등 학교생활 불만, 버스 무정차 등 이용 불편, 병역 신체검사 문의
20대	GTX 청량리 변전소 반대, 과장 의료광고 등 신고, 군경력증명서 등 요청
30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과천 주암 데이터센터 반대, 인천2호선 고양 연장
40대	위례선 트램 주민 건의, 제2경인선 착공, ●●시의 ○○역 공사비 증가분 추가 부담 반대
50대 이상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위례선 트램 주민 건의, GTX 청량리 변전소 반대

주요 민원

- 8월 주요 민원은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요청, 정거장 주변 정비 등 위례선 트램 개통 관련 주민 건의 사항 등

순위	주요 민원내용	건수
1	고양은평선 일산 연장 요청	14,628
2	정거장 주변 정비 등 위례선 트램 개통 관련 주민 건의 사항	5,962
3	GTX 청량리 변전소 반대	3,982
4	◆◆ ◇◇지구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3,548
5	해충 방역 요청	2,262
6	제2경인선 조속 착공 요구	1,700
7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요청	1,499
8	위례삼동선, 위례신사선 직결 찬반 등	1,149
9	뉴스테이 의무임대기간 만료 후 분양전환 관련 의견제출	805
10	■■ □□지구 기반시설 공사 중단 문제 해소 요청	749
11	인천시 검단구 출범에 따른 검단구청 신청사 및 검단구청역 신설 요구	725
12	「서울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 중 아파트 하부 관통 철회 요구	723
13	위례과천선 북위례·거여역 등 연장 요청	691
14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의견	535
15	●●시의 ○○역 공사비 증가분 추가 부담 반대	492

〈주요 민원 키워드〉

세제개편안
 뉴스테이 의무임대기간 만료
 제2경인선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변전소 설치 반대
 공사비 반대
 고양은평선
 위례선 트램
 검단구 출범
 위례과천선
 해충 방역
 위례삼동선
 인천2호선
 서울5호선
 기반시설 공사 중단

02 | 민원주의보(9월) : 노인돌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돌봄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인의 날(10.2.)을 맞아 현장수요 확인·검토를 위한 민원 분석 및 주의보 실시

* '24년 말 초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20% 이상) 진입

1 민원 현황

○ (민원추이) 최근 3년간('23.9월~'26.8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노인돌봄' 관련 민원은 총 14,626건(월평균 406건)

- '23년 9월 이후 '노인돌봄' 관련 민원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5년 7월이 796건으로 가장 많음

* '26년 '노인돌봄' 관련 월평균 민원은 576건으로, '23년(월평균 292건) 대비 1.8배 증가

〈 최근 3년간('23.9월~'26.8월) 월평균 민원 추이 〉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민신문고 등 운영 중단('25.9.26.~10.27.)으로 해당 기간 민원 감소

○ (신청인) 남성(55.4%)이 여성(44.6%) 보다 많고, 연령별로 50대(33.9%), 40대(25.8%), 30대(17.4%), 60대(15.6%) 등의 순

* 성별 정보 확인 가능 10,259건(전체의 70%), 연령 정보 확인 가능 8,909건(전체의 60.9%) 대상

○ (신청지역) 경기(31.2%), 서울(18.5%), 인천(6.5%), 충남(5.3%) 등의 순

* 신청지역 정보 확인 가능 14,168건(전체의 96.9%), 민원의 처리기준이 아닌, 신청지역 기준임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23.1%), 경기도(11.5%), 국민건강보험공단(9.8%) 등의 순

2

개선 방향

현재

- ▲ (노인돌봄 시설 확충 요구) 요양시설 확충, 운영 개선 요구
 - 돌봄 소홀 및 안전관리 미비에 대한 우려와 조치 요구
 -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 상시 확인 곤란에 따른 신뢰 확보 문제
 - 노인요양시설 부족 우려와 시설 입소 관련 고충
- ▲ (돌봄 서비스 질 개선 요구) 돌봄 시설 내·시설 밖 서비스의 질 향상
 - 가족요양 등 가정에서의 돌봄에 대한 지원 확대 요청
 - 요양보호사의 근로 고충 제기 및 처우 개선 요구
 - 생활 돌봄과 함께 고독감·소외감 완화를 위한 정서적 돌봄 강화 요구
- ▲ (평생교육 확대 요청) 노인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 요구
 - 디지털 기기 사용 등 일상생활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교육 수요
 - 노인종합복지관 강좌·수강 등 평생 교육 이용 관련 불편 사항



개선 방향

- ▲ (노인돌봄시설 운영 내실화) 시설 환경 점검 및 안전 관리 강화
 - 고령자 특성을 반영한 선제적 안전 점검 및 매뉴얼 확충
 - 시설 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CCTV 관리점검 및 접견 시스템 마련
 - 공립 요양시설 확충 및 지역별 수요 분석을 통한 시설 배치 필요
- ▲ (돌봄 서비스 질 제고) 돌봄 지원 강화 및 서비스 품질 향상
 - 돌봄부담 완화를 위한 가정 지원 방안 마련 검토
 - 돌봄 종사자 처우 현황 점검 및 요청사항 논의·검토
 - 고독감 등 예방을 위한 봉사활동 활성화 등 외부 교류 확대 검토
- ▲ (평생교육 활성화) 고령층 교육 기회 확대 및 지원 강화
 - 스마트폰·디지털 기기 활용 등 실생활 중심 교육 확대
 - 평생교육 강좌·수강 등 사용자 불편사항 확인 및 개선 검토

3 주요 민원 유형 및 사례

[시설 운영 관련 불만]

- 욕창 발병의 원인은 기저귀를 두르고 계시는 어머니가 소변이나 대변으로 기저귀가 젖어 있는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어 있음이 명백한 원인인데 하루에 기저귀를 몇번 교체하는지 의문입니다.(25.5.)
- 멀리서 왔는데 얼굴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사정하여, 휴대전화를 반납하고 각서를 작성, 제출 후 겨우 20분 정도 면담을 하고 요양원에서 나왔습니다. 면회·외출·외박을 주 보호자만 허용하고 그 외 다른 자녀들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25.3.)
- 입소시 요양원 측에서 2주 이상 면회나 전화금지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야 요양원과 친해지고 의지한다고 하셔서, 3주 이상 지나 면회를 요청했는데 처음 보는 순간 살이 너무 빠져있고 기력이 없어 충격을 받았습니다.(24.6.)
- 친정어머니께서 치매로 3개월 전 요양원에 입소했는데, 요양원 측에서 배회가 심한 어르신은 돌보기가 힘들다며 다른 곳으로 옮겨가기를 권하더군요. 치매로 인해 배회하는 어르신들이 전국에 비일비재 많을텐데 다 어찌나 하는 걱정과 앞으로는 환자는 늘어 날텐데 다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걱정이 됩니다.(26.8.)
- 친척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신데, 요양원이 폐업될 거란 얘기가 들립니다. 우리 어르신은 어디로 가야하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하기만 하네요. 가뜰이나 서울은 요양원 등이 부족하다는데, 갑작스런 통보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25.8.)

[안전관리 강화 요청]

- 가해 입소자가 어머니를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당시 방 안에는 어르신들을 보호할 근무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령 및 치매 입소자들이 밀집한 시설에서 돌발적인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분리할 수 있는 인력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26.5.)
- 목욕 이동침대의 바퀴, 목욕의자 고장 등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특히 목욕의자는 다리·받침·고정 장치 등이 흔들리거나 고장나 았았을 때 의자가 기울어지거나 미끄러지는 위험이 있어 여러 번 의견을 전달했으나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습니다.(25.11.)

[가족 돌봄 지원 강화 요청]

- 익숙한 가정에서 대상자를 돌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에도 똑같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외부에서 일하면 3~4시간 인정해주는데, 가족이 집에서 재가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1시간 30분 가량 인정해 주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25.4.)
- 가족 돌봄은 사실상 24시간 돌봄인데, 건강보험이나 퇴직금 제도에서 제외는 불합리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 노인심리상담사로 충분히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데도 남편이 치매 환자라 어쩔 수 없이 가족 돌봄을 선택 했습니다.(24.9.)
- 아직 연세가 많지 않으시고 가족의 품에서 지내기를 바라기에 요양원에 모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치매 환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에게는 장기간의 돌봄으로 인한 신체적·정서적 부담을 덜고,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 단기보호제도를 실제 현장에서 이용하려고 하니,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는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만 정작 이용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혔습니다.(26.8.)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요구]

-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난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업무 과중 등은 종사자들의 직업 만족도와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이는 다시 인력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요양시설의 역할과 중요성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일상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요양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 지원이 절실합니다. 보다 많은 인력이 현장에 유입되고, 어르신 개개인에 대한 섬세한 돌봄과 정서적 케어가 가능해지는 구조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요양서비스의 질적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25.6.)
- 요양원 입소 어르신들은 고령, 치매, 거동불편, 응급상황 발생 가능성 등으로 24시간 지속적인 관찰과 돌봄이 필요한 상태라,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호출벨에 대응해야 하며, 낙상 예방, 배변 보조, 응급상황 대처 등 업무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 중에도 사실상 대기상태에 놓여 있으며,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요양원에서는 이러한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처리하여 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어,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26.5.)

[정서 돌봄 강화 요구]

-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식사를 제공하며 약을 챙겨드리는 것만으로 좋은 돌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일부 시설에서는 직원과의 자연스러운 말걸기와 정서적 교류가 부족해 보였는데, 자기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일수록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며, 무엇을 좋아하는지 묻고, 음악을 듣고 웃으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도록 돕는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고예방과 안전관리를 이유로 지나친 생활통제로까지 이어지는 경우, 어르신들이 이야기하고 웃으며 살아갈 일상의 행복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26.8.)
- 예전에는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봉사를 많이 와서 치매 어르신들 말벗도 하고 요양원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 행사말고는 오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예전처럼 봉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체계를 제안합니다.(26.8.)

[평생교육 확대 요청]

- 어르신은 과수원을 운영하며 직접 유튜브 채널을 개설, 농장과 일상을 소개하고 싶어합니다. 스마트폰도 사용하고 있으며 배우려는 의지도 매우 강하지만 유튜브 채널 개설, 영상 업로드 등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알려줄 사람을 찾지 못해 복지관에 문의한 결과, 직접 도움을 주기는 어렵고 관련 교육 강사에게 문의 정도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향후 개설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 점은 스마트폰 교육 프로그램은 있어도, 실제로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개별적인 디지털 활용 지원을 받을 창구는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고령층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도 디지털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26.6.)
- 우연히 마트에서 저를 보고 어르신이 조미료를 찾아 달라고 했는데 바로 앞 소금, 조미료 등이 있고 상품 글씨도 무척 크게 되어 있었습니다. 햄류 같은 것은 금방 찾는 것으로 보아 햄이나 통조림 같은 것은 모양으로 찾는 것 같아 혹시 한글에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평생학습관 교육에 관련 교육을 추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25.5.)
- 노인종합복지관에는 여러 평생교육 강좌가 개설되어 있는데, 접수 후 수납은 계좌이체 또는 방문수납만 가능합니다. 매번 현금으로 수납하는 건 불편함이 크고, 현재 복지관이 오픈한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매번 카드 결제 준비중으로만 응대하고 언제쯤 카드결제와 현금영수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4.1.)

03 | 기관별 동향(8월)

중앙행정기관

· 8월 중앙행정기관 민원은 총 169,687건으로 전월 대비 6.1% 감소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경찰청	50,364	45,083	-10.5%
국토교통부	36,987	36,037	-2.6%
고용노동부	12,781	12,572	-1.6%
법무부	8,565	9,520	11.2%
국방부	7,134	7,242	1.5%
국민권익위	7,242	6,575	-9.25
식약처	5,685	5,129	-9.8%
대검찰청	4,505	4,434	-1.6%
보건복지부	4,105	4,065	-1.0%
과기정통부	4,047	3,812	-5.8%
공정위	3,763	3,725	-1.0%
행정안전부	3,505	3,357	-4.2%
국세청	3,062	3,017	-1.5%
기후부	4,259	2,735	-35.8%
교육부	2,189	1,784	-18.5%
농식품부	1,559	1,408	-9.7%
해양수산부	1,638	1,370	-16.4%
금융위원회	2,034	1,157	-43.1%
재정경제부	518	1,135	119.1%
소방청	1,424	1,101	-22.7%
병무청	1,002	1,011	0.9%
총리비서실	390	961	146.4%
문체부	910	903	-0.8%
인사혁신처	987	889	-9.9%
개보위	1,801	867	-51.9%
국가인권위	768	739	-3.8%
국가보훈부	735	720	-2.0%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산림청	782	718	-8.2%
조달청	842	691	-17.9%
산업통상부	755	666	-11.8%
공수처	814	643	-21.0%
외교부	617	599	-2.9%
관세청	574	544	-5.2%
기획예산처	503	461	-8.4%
방미통위	542	447	-17.5%
국무조정실	312	435	39.4%
중기부	327	316	-3.45
국가유산청	236	312	32.2%
법제처	266	280	5.3%
성평등가족부	245	239	-2.5%
해양경찰청	293	228	-22.2%
통일부	139	181	30.2%
지식재산처	95	179	88.4%
질병관리청	159	147	-7.6%
농촌진흥청	73	77	5.55
국가데이터처	105	71	-32.4%
기상청	94	58	-38.35
국교위	61	48	-21.3%
재외동포청	33	37	12.1%
방위사업청	37	34	-8.1%
새만금개발청	29	33	13.8%
원안위	23	25	8.7%
우주항공청	12	22	83.3%
행복청	16	18	12.5%

지방정부(광역)

· 8월 지방정부(광역) 민원은 총 77,122건으로 전월 대비 4.9% 감소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서울특별시	44,185	42,426	-4.0%
세종특별자치시	5,928	6,090	2.7%
인천광역시	5,759	5,101	-11.4%
경기도	5,021	5,045	0.5%
대전광역시	5,536	4,694	-15.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3,631	3,198	-11.9%
부산광역시	2,763	3,125	13.1%
울산광역시	2,407	1,468	-39.0%
대구광역시	1,433	1,337	-6.7%
충청남도	1,066	893	-16.2%
전북특별자치도	607	835	37.6%
제주특별자치도	630	806	27.9%
경상남도	539	583	8.2%
강원특별자치도	545	560	2.8%
충청북도	615	509	-17.2%
경상북도	462	452	-2.2%

지방정부(기초)

· 8월 지방정부(기초) 민원은 총 1,033,224건으로 전월 대비 1.1% 감소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경기 수원시	30,296	30,687	1.3%	서울 광진구	10,014	10,288	2.7%
경기 성남시	24,927	23,352	-6.3%	경북 포항시	9,587	10,197	6.4%
경기 화성시	23,152	22,438	-3.1%	서울 중구	9,559	9,582	0.2%
충북 청주시	21,183	22,091	4.3%	부산 부산진구	9,430	9,572	1.5%
경기 용인시	19,474	18,810	-3.4%	광주 광산구	9,548	9,478	-0.7%
경기 안산시	19,251	18,279	-5.1%	서울 양천구	8,585	9,287	8.2%
경남 창원시	18,964	17,244	-9.1%	인천 부평구	9,021	9,258	2.6%
경기 고양시	17,356	16,897	-2.6%	서울 은평구	9,590	9,219	-3.9%
충남 천안시	17,073	15,989	-6.4%	서울 동대문구	8,673	8,991	3.7%
경기 평택시	16,725	15,700	-6.1%	대구 달서구	10,541	8,895	-15.6%
서울 관악구	14,151	15,398	8.8%	경기 남양주시	8,992	8,803	-2.1%
서울 마포구	14,636	14,763	0.9%	경북 구미시	8,350	8,758	4.9%
서울 강서구	14,705	14,761	0.4%	서울 중랑구	8,894	8,710	-2.1%
서울 송파구	14,653	14,685	0.2%	인천 연수구	8,635	8,379	-3.0%
전북 전주시	13,373	14,027	4.9%	인천 미추홀구	9,116	8,329	-8.6%
경기 부천시	15,094	13,877	-8.1%	광주 서구	8,083	8,263	2.2%
경기 시흥시	12,876	13,622	5.8%	제주 제주시	8,430	8,222	-2.5%
서울 서초구	14,114	12,901	-8.6%	서울 노원구	8,642	8,108	-6.2%
서울 강동구	13,388	12,668	-5.4%	대구 수성구	9,944	8,019	-19.4%
서울 영등포구	12,098	12,666	4.7%	경기 의정부시	8,357	7,593	-9.1%
대전 서구	12,166	12,269	0.9%	서울 구로구	7,814	7,464	-4.5%
서울 강남구	12,588	12,218	-2.9%	경기 김포시	7,726	7,269	-5.9%
서울 용산구	10,835	11,977	10.5%	인천 검단구	7,613	7,261	-4.6%
광주 북구	11,272	11,220	-0.5%	서울 종로구	7,898	7,146	-9.5%
경기 안양시	11,974	11,141	-7.0%	대구 북구	7,351	7,122	-3.1%
인천 남동구	10,297	11,095	7.8%	경기 오산시	5,640	7,009	24.3%
울산 남구	10,862	10,725	-1.3%	서울 성북구	7,160	6,754	-5.7%
인천 서해구	11,376	10,582	-7.0%	서울 서대문구	6,631	6,618	-0.2%
대전 유성구	9,132	10,555	15.6%	강원 원주시	6,604	6,499	-1.6%
경남 김해시	11,410	10,413	-8.7%	광주 순천시	5,947	6,314	6.2%

※ 8월 민원 상위 60개 지방정부(기초) 대상

교육청

· 8월 교육청 민원은 총 9,317건으로 전월 대비 15.4% 감소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경기도교육청	4,497	3,975	-11.6%
서울특별시교육청	2,014	1,661	-1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580	503	-13.3%
부산광역시교육청	550	411	-25.3%
경상북도교육청	400	394	-1.5%
인천광역시교육청	420	386	-8.1%
경상남도교육청	459	330	-28.1%
충청남도교육청	327	265	-19.0%
대구광역시교육청	284	261	-8.1%
충청북도교육청	203	256	26.1%
대전광역시교육청	286	208	-27.3%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200	193	-3.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314	161	-48.7%
울산광역시교육청	210	129	-38.6%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72	109	-36.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94	75	-20.2%

공공기관 등

· 7월 공공기관 등의 민원은 총 47,397건으로 전월 대비 8.3% 감소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기관명	26.7월	26.8월	증감률
한국토지주택공사	5,307	4,096	-22.8%	부천도시공사	282	311	10.3%
금융감독원	4,720	3,739	-20.8%	국민연금공단	346	301	-13.0%
한국소비자원	2,713	2,557	-5.8%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314	289	-8.0%
한국전력공사	3,876	2,539	-3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379	264	-30.3%
국가철도공단	1,325	1,699	28.2%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97	260	-12.5%
한국철도공사	1,183	1,536	29.8%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265	252	-4.9%
한국도로공사	1,186	1,235	4.1%	한국개발연구원	320	246	-23.1%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168	999	-14.5%	농협중앙회	293	245	-16.4%
국민건강보험공단	1,005	880	-12.4%	인천시설공단	203	207	2.0%
한국부동산원	428	879	105.4%	국립공원공단	192	182	-5.2%
한국산업인력공단	1,594	806	-49.4%	한국환경공단	219	178	-18.7%
대한법률구조공단	737	796	8.0%	새마을금고중앙회	222	176	-20.7%
근로복지공단	708	795	12.3%	한국콘텐츠진흥원	213	167	-21.6%
대규모시설관리공단	799	792	-0.9%	대한체육회	250	161	-35.6%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807	662	-18.0%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74	152	-12.6%
한국농어촌공사	664	642	-3.3%	서민금융진흥원	280	152	-45.7%
방송미디어통신심의회	729	630	-13.6%	인천국제공항공사	233	152	-34.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822	612	-25.6%	경기주택도시공사	231	149	-35.5%
한국제품안전관리원	790	568	-28.1%	주택관리공단	148	142	-4.1%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618	556	-10.0%	손해보험협회	163	133	-18.4%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2	497	855.8%	한국가스안전공사	114	128	12.3%
한국자산관리공사	470	466	-0.9%	화성도시공사	188	128	-31.9%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326	430	31.9%	울산시설공단	153	127	-17.0%
한국수자원공사	433	420	-3.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08	125	15.7%
한국인터넷진흥원	420	410	-2.4%	인천교통공사	113	123	8.9%
수원도시공사	363	391	7.7%	한국도로교통공단	132	123	-6.8%
주택도시보증공사	401	371	-7.5%	한국에너지공단	140	121	-13.6%
충남대학교	154	368	139.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77	118	-33.3%
한국교통안전공단	350	350	0.0%	한국거래소	215	113	-47.4%
게임물관리위원회	291	330	13.4%	한국기계전자전자시험연구원	89	111	24.7%

※ 8월 민원 상위 60개 공공기관 대상

알림판

민원정보분석시스템 이용신청 안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등을 검색하고 분석이 가능한 민원정보분석시스템(www.pias.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민원업무 담당자, 민원반발 부서의 사업 담당자 등은 분석시스템을 기관별 민원분석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www.pias.go.kr(업무망)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의 '사용자 계정신청 안내'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망은 방화벽 포트 허용 조치를 위해 Helpdesk(070-4108-3625)로 문의 요망

담당자 안내

목 차	담당자	연락처
01. 민원 동향(8월)	이이슬 주무관	044-200-7284
02. 민원주의보(9월)		
03. 기관별 동향(8월)		
시스템 이용 문의	HelpDesk	070-4108-3625